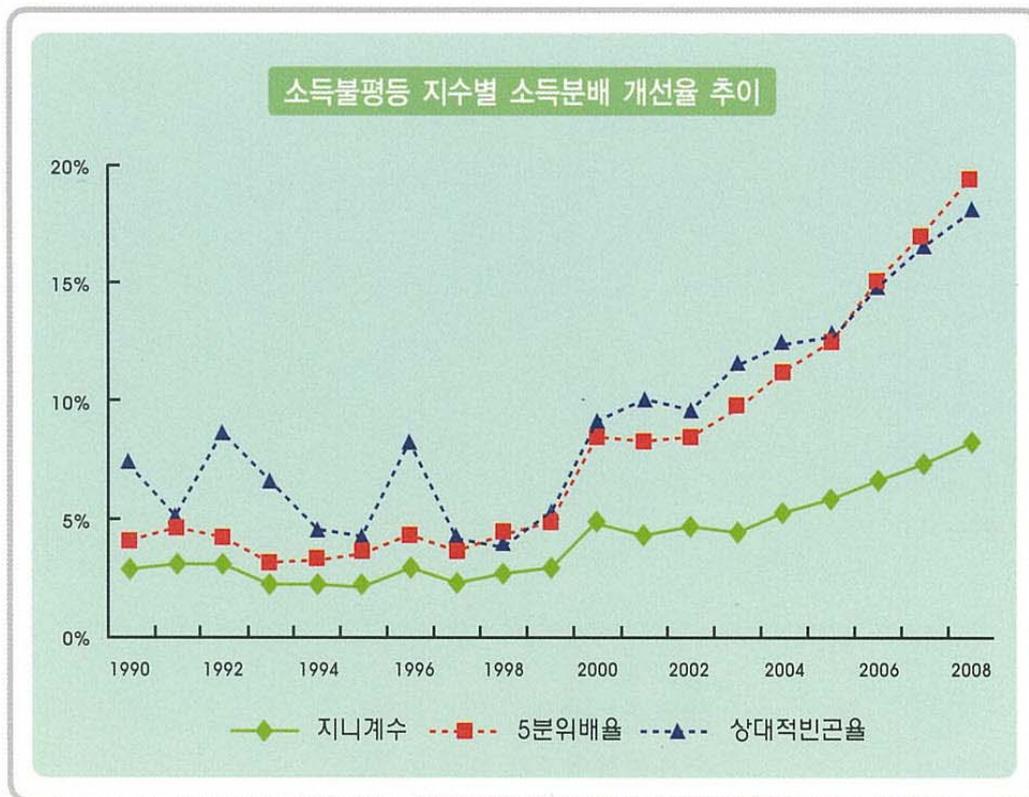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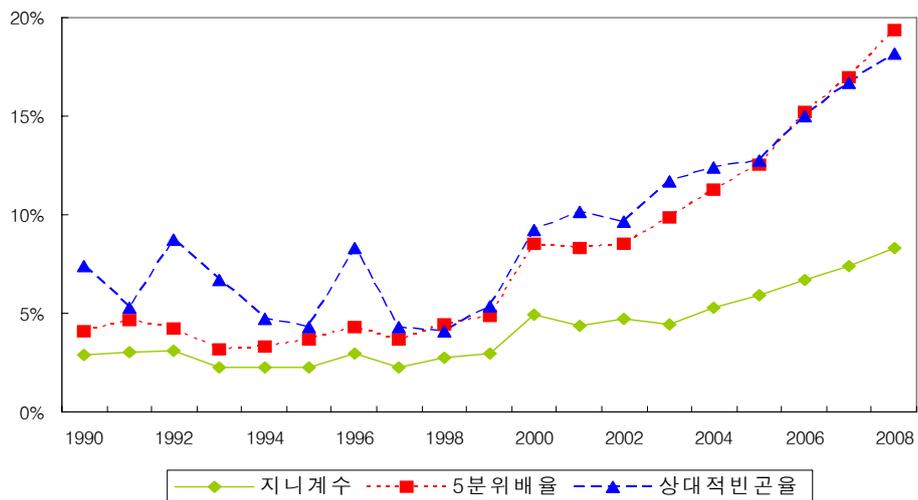


2009. 12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 인 성

소득불평등 지수별 소득분배 개선을 추이



2009.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장인성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02-788-4653
ijang@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 인 성

2009.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I. 머리말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또 다시 빈곤층 증가와 소득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양극화 및 분배의 악화는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인적 자원의 고른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추이 및 변화 원인을 고찰해 보고 분배에 관한 국민들의 견해와 소득분배의 수준을 국제 비교해 보는 한편 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도의 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함.

II.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추이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분배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쿠즈네츠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므로 성장에 따라 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적자원의 질이 향상되면서 성장에 따라 분배가 개선된다고 봄.

-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70년대에 소득분배가 악화된 현상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소득 분배가 다시 개선된 현상은 이러한 이론과 부합함.
-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의 주요 특징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과 비농업실업률의 감소임.
 - 그러나 60년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임금격차의 확대가 본격화되지 않아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음.
-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소득분배는 1970년 이후 도시지역 실업인구의 흡수가 마무리되고 직종 및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뚜렷이 악화되었음
 - 이 시기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은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기업집중현상의 심화 및 부문내 소득격차의 확대,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기위한 각종 특별지원책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임.
-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도성장기의 기본적인 재분배 및 복지 정책은 생산활동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한 복지의 해결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요소투입위주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대되고 임금이 증가하는 한편 내수비중이 커지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
 - 기술집약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은 1980년대 말의 빠른 임금 인상 및 고졸 기능인력과 대졸 이상 취업자간의 임금격차 감소의 토대가 되었음.

며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저학력 취업자 비중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왔음

- 또한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의 경우 내수비중의 확대가 동반되었으며 서비스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아 소득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임.
 - 경제개발 시작 이후 항상 투자 재원의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투자재원자립도가 100%를 넘어 1988년에는 129.3%로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고도성장 시기와 같이 투자 재원의 마련을 위해 분배 및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의미함.

III. 최근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응책

- 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 분배가 개선된다는 고전적 이론과 달리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됨.
 - 1995~2008년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각각 0.268, 4.09배, 9.3%에서 0.325, 6.2배, 15.4% 등으로 악화되어 왔음.
 -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1992년도에 75.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63.3%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소득 양극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고용유연화로 인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에 따른 수출

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및 대기업 고용비중 감소, 내수부진 및 생산성 격차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하락 및 퇴출 등을 꼽을 수 있음.

- 소득격차의 개선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업 등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의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강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을 통해 경제활동 단계에서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 과제는 그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장소득의 불균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의 꾸준한 병행이 필요함.

IV.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분배관련 지표 국제비교

-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며 집단별 견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 2009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70.1%의 응답자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25.7%는 보통, 4.1%만 공평하다고 응답함.
 - 그러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비해 2009년도 조사에서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가 다소 줄어든 데는 꾸준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사방식 및 설문을 사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3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92.8%가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 평균인 80.7%보다 높았음.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을 국제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임.

- 우리나라는 92.8%가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 평균 80.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한국이 77.8%로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사한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반면 미국은 32.6%만이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 두드러지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캐나다 44%, 서독 47.2%, 일본 47.4% 등도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국제비교해 보면 상대적 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은 평균보다 낮으나, 고령가구의 빈곤률이 OECD 최고 수준이며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 GDP에서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3.5%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총지출에서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의 분야별 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사회보호와 같은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비해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의 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음.

-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복지지출이 증가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
 -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 그러나 조세 및 이전지출(tax and transfer)이 빈곤률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1%에 그쳐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남
-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의 사회적 지출의 평균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계산해 보면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0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5년~2007년 사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증가분이 0.056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추가적 사회적 지출이 필요한 바,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5.65%에서 10.12%로 4.47%p 증가하는 데 그쳐 사회적 지출 증가는 1995~2008년 간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증가분의 약 47.3%만을 줄이는 데 그침.

V. 맺음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이상 70년대의 경우와 같이 높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정책이 곧 복지정

책이었던 시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의 증가가 곧바로 복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던 시대가 끝나고 현재의 성장속도에 맞는 현실적인 산업, 고용 및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고려할 때 전체 재정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지출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지출 분야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차 례

요 약 / iii

I. 머리말 / 1

II.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추이 / 3

1. 70년대 소득불평등 심화 3
2.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소득분배 개선 7

III. 최근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응책 / 14

1.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와 중산층 감소 14
2. 최근 소득불평등도 심화의 원인 19
3. 정책적 대응 방향 24

IV.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분배관련 지표 국제비교 / 26

1. 분배 수준 및 재분배에 대한 국민 견해 26
2. 소득분배 수준과 사회적 지출 국제비교 34
3. 사회적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43

V. 맺음말 / 49

표 차례

[표 1]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계층 비율(OECD 기준)	18
[표 2]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규모	20
[표 3] 분배에 대한 견해	28
[표 4] 분배 및 사회복지 관련 견해	30
[표 5]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추이	40

그림 차례

[그림 1] 실업률 추이	4
[그림 2] 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4
[그림 3] 광공업 노동생산성지수(1995=100)	8
[그림 4] 학력별 취업자 비율	9
[그림 5] 학력별 임금비율	9
[그림 6] 투자재원자립도	11
[그림 7] 내수와 수출의 대 GDP 비중	11
[그림 8] 근로 소득 10분위 배율	12
[그림 9] 저소득층 분기별 소득 증가율의 최근 동향	15
[그림 10] 지수별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16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연봉 추이	21
[그림 12]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수	22
[그림 13] 소매업체별 판매액 증가율	23
[그림 14] 분배에 대한 선호도 국제 비교	33
[그림 15] 상대적 빈곤률 국제비교	35
[그림 16] 지니계수 국제비교	37
[그림 17] 근로소득 불평등도	38
[그림 18]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07년)	40
[그림 19] 지출 비중 국제비교	41
[그림 20] 한국의 분야별 지출 비중 - OECD 평균 분야별 지출 비중 ...	42
[그림 21] 소득불평등 지수별 소득분배 개선을 추이	44
[그림 22]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	44
[그림 23]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 수준이 소득불평등지수의 개선에 미친 영향	46
[그림 24]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출 수준과 지니계수 개선의 관계	47
[그림 25]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의 증가가 지니계수 개선에 미친 영향	48

I.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또 다시 빈곤층 증가와 소득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양극화 및 분배의 악화는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림으로써 노사갈등 및 지역간 갈등의 해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위기의 극복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고른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경제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추이 및 변화 원인을 고찰해 보고 분배관련 지표 및 분배에 관한 국민들의 견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는 한편 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도의 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현상을 크게 세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제 2장 및 3장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실제 관계가 고전적 이론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 외환위기 이전 및 고전적 이론과 달리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로 나누어 소득분배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분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보면, 첫 번째는 정부주도하의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고도성장기(1970~1988), 두 번째는 요소투입증대를 통한 고도성장 이 한계에 달하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이전이 본격화된 시기(1989~1997), 세 번째는 외환위기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고용유연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 시기(1998~현재)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각 단계별 소득분배의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70년대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의 소득분배 개선 현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성장과 분배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인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쿠즈네츠(1955)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므로 성장에 따라 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적자원의 질이 향상되면서 성장에 따라 분배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이론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가 강화되어 근로형태별 임금격차가 발생하였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수출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였으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임금 격차가 기업간, 그리고 산업부문 내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소득분배의 격차는 다시 지속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이와 같은 고용 및 산업 구조의 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적 현상이므로 중장기적 대응책 수립을 통해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과 중첩되어 미래의 분배 상황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의 해결에 힘쓰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적절한 분배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분배 및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분배 정책의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재분배를 위한 그동안의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도의 감소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분석해 본 후 재정지출의 재원 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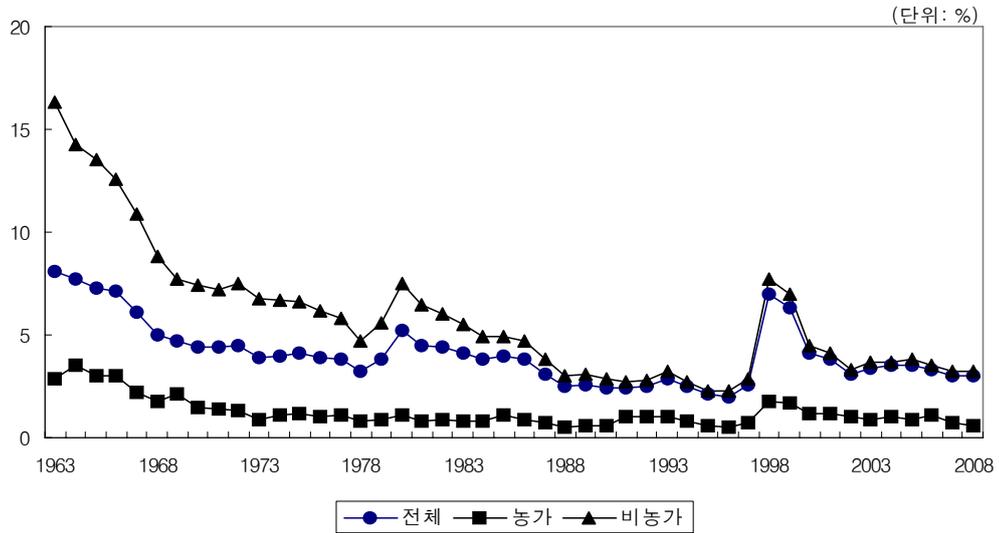
1. 70년대 소득불평등 심화

소득분배의 추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에 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와서야 비로소 전국의 모든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가구소득 통계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자료는 모집단이 작거나, 도시 혹은 농촌 등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 가구 혹은 2인 이상 가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1982년 도시가계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관된 통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 연구자들이 스스로 수집한 산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각자의 방식에 의해 추계한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와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시대별 소득분배 추이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후반 사이의 소득분배 추이를 연구한 주학중(1979)에 의하면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농업부문의 축소와 비농업부문의 확대에 요약되는 경제개발 초기인 1965~1970년간에는 소득분포가 별반 차이가 없거나 다소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 초기의 주요 특징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으로 인해 비농업실업률이 감소한 것이다. 실업률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1]에서 보듯이 1963~1970년간 농가의 실업률이 2.9%에서 1.5%로 낮아진 데 비해 비농가의 실업률은 16.3%에서 7.4%로 크게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은 동기간 8.1%에서 4.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산업별 고용비중은 농림어업이 동기간 63%에서 50.4%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7.9%에서 13.2%, 서비스업은 25.8%에서 32.4%로 각각 5.3%, 6.6%씩 증가하였다. 한편 이처럼 비농업 실업률이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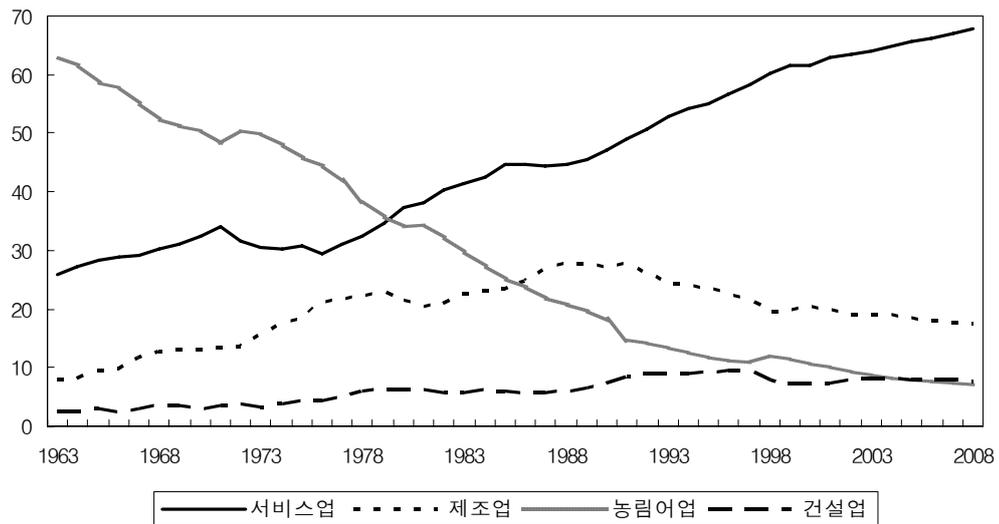
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의 높은

[그림 1]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4 ◆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실업률로 인해 임금격차의 확대가 본격화되지 않아 지니계수는 1965년 0.34에서 1970년 0.33으로 약간 낮아졌으며 소득십분위 분배율¹⁾은 동 기간 0.22에서 0.20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소득분포는 1970년 이후 도시지역 실업인구의 흡수가 마무리되고 직종 및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뚜렷이 악화되었다. 이 시기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첫째,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김대모(1979)에 의하면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비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1970년대에 고임금 고학력 직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력별 임금지수의 경우 1971년에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초등학교 졸업자 임금의 3.33배였으나 1977년에 4.04배로 증가하였으며 직종별 임금지수의 경우 전직종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71~1977년간 생산직은 78.1에서 67.9로 감소한 반면 전문기술직은 179.9에서 203.2, 행정관리직은 270.9에서 328.7로 각각 증가하였다. 둘째, 주학중(1979)은 기업집중현상의 심화 및 부문내 소득격차의 확대가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의 광공업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0인 이상 대기업의 수가 1970년 2.9%에서 1976년 5.9%로 크게 증가하여 대기업과 영세기업간의 부문 내 소득격차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경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5년 12.2%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10년간 10%p 증가한 가운데 양자간의 소득차이가 전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별지원책, 높은 인플레이션 등도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는 1976년 다시 0.39로 높아졌으며 소득십분위 분배율 역시 0.25로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심화현상은 1980년대 전반기에 물가가 안정되고 임금소득의 실질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1960년대 후반에 비해 높은 불균등도를 유지하였다(권순원 외(1992), 이정우·황성현(1998))

1) 소득계층의 최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을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써 사용된다. 뒤에 소개할 소득 10분위 배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참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도성장기의 기본적인 재분배 및 복지 정책은 생산활동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한 복지의 해결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이나 부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방식 대신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농업종사자의 수를 줄여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극화가 외환위기 이후에 제기된 새로운 문제의식이 아니라 경제개발 초기부터 이미 제기되기 시작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양극화문제를 다룬 임종철(1975)은 1960년대의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농업과 비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및 소득계층간의 양극화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양극화 현상의 근본원인을 시장경쟁의 격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중(1971)은 1960년대에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아 복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그 구체적 내용은 현재와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균형발전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권위주의체제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실업률의 하락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농업에서 비농업, 내수에서 수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 변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소득수준의 빠른 향상이 가능하여 소득분배 악화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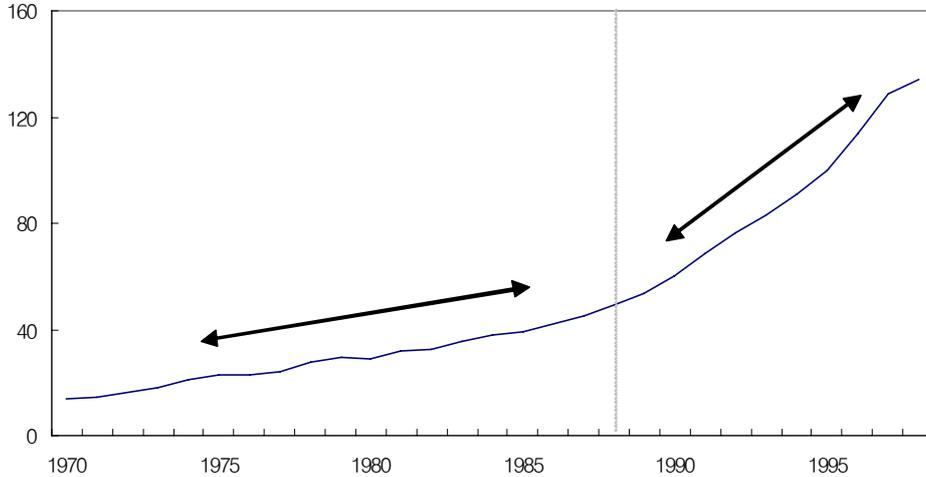
2.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소득분배 개선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8.3%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요소투입위주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기술집약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대되고 임금이 증가하는 한편 내수비중이 커지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총산출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자본, 노동, 및 기술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저개발 상태의 경제에 존재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낮은 교육수준 등은 성장 초기에 노동투입의 높은 증가율을 가능케 하나 이러한 증가율은 초기의 저개발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투입의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자본장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점차 낮아져 자본투입의 증가율 또한 감소하게 된다. 전승철·김영준·하준경(2005)에 의하면 1970~2000년 중 우리나라 일인당 물적자본의 축적은 12.5배 증가하였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증가율의 감소는 총산출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요소투입증가율이 낮은 선진적 경제구조에 진입할수록 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퇴조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이다.

[그림 3]은 광공업 노동생산성지수(1995년=100)가 1970~1987년 사이에 13.9에서 45.1로 올랐으나 1988~1998년 사이에는 49.6에서 134.6으로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집약화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광공업 노동생산성지수(19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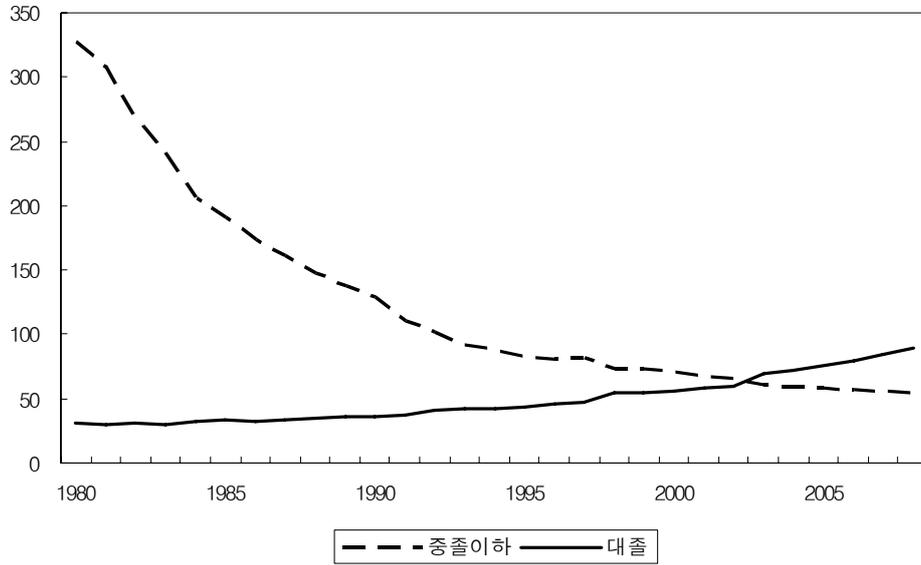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김인철·민성환(2003)은 제조업 중요소생산성을 계산한 후 1970~1990년간과 비교하여 1990~2000년간에는 요소투입의 증가율은 둔화한 반면 중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2.40에서 4.15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집약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은 1980년대 말의 빠른 임금 인상 및 고졸 기능인력과 대졸 이상 취업자간의 임금격차 감소의 토대가 되었으며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중졸 이하의 저학력 취업자 비중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온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를 보면 고졸 취업자를 100으로 할 때 중졸 이하 졸업자의 비율이 1980~1990년대 초반에 걸쳐 크게 감소하여 저학력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에서 보듯이 취업자의 학력별 임금비율의 경우 고졸 취업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1989년 대졸 취업자의 임금은 200이었으나 1994년에는 148로서 5년간 그 격차가 26% 감소하였다.

[그림 4] 학력별 취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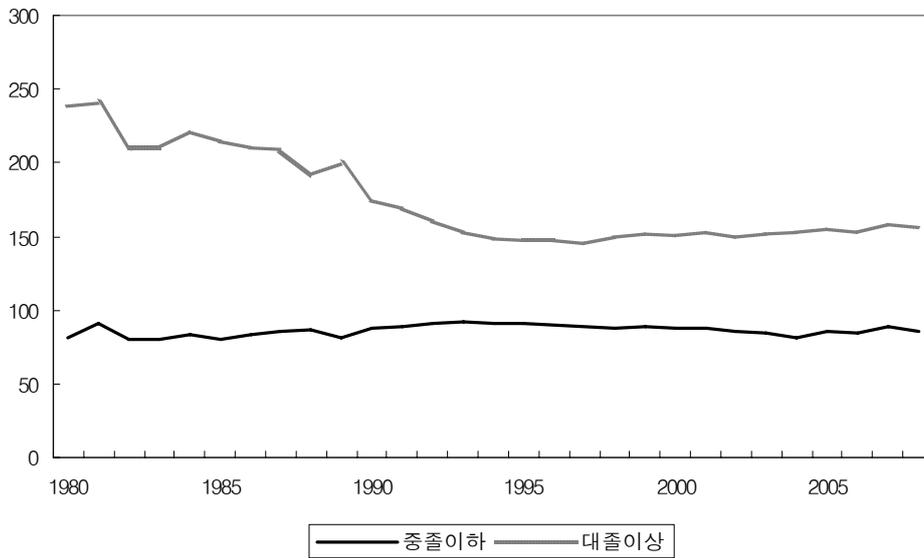
(단위: 고졸=100)



자료: 통계청

[그림 5] 학력별 임금비율

(단위: 고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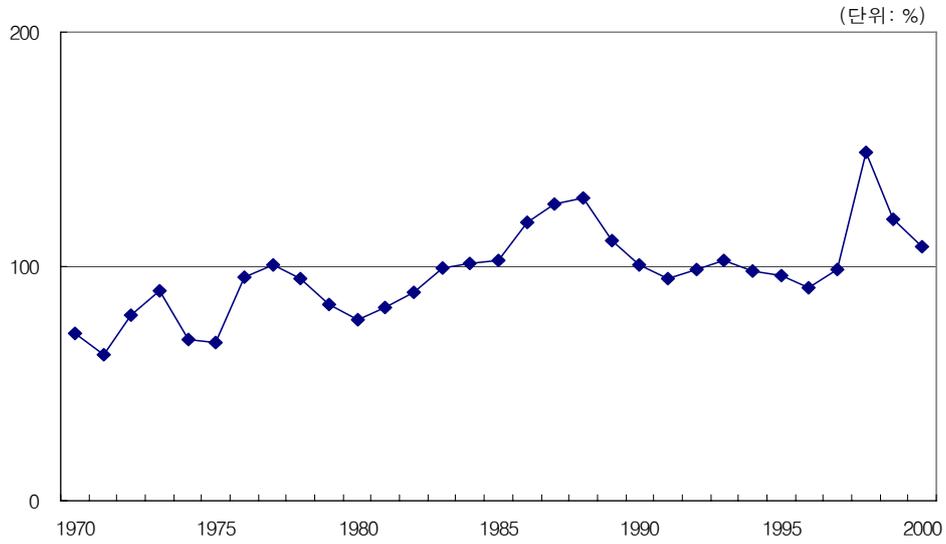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편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이 퇴조함에 따라 앞서 [그림 2]에서 보았듯이 제조업의 고용비중 또한 198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한층 높아졌다.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특징이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었다면 80년대 후반 이후 기술집약적 산업화시기에는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부문으로 노동력이동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즉 서비스업의 양적 확대가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및 투자의 확대와 함께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기술집약화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 및 퇴조하는 노동집약산업에서 배출된 노동력의 흡수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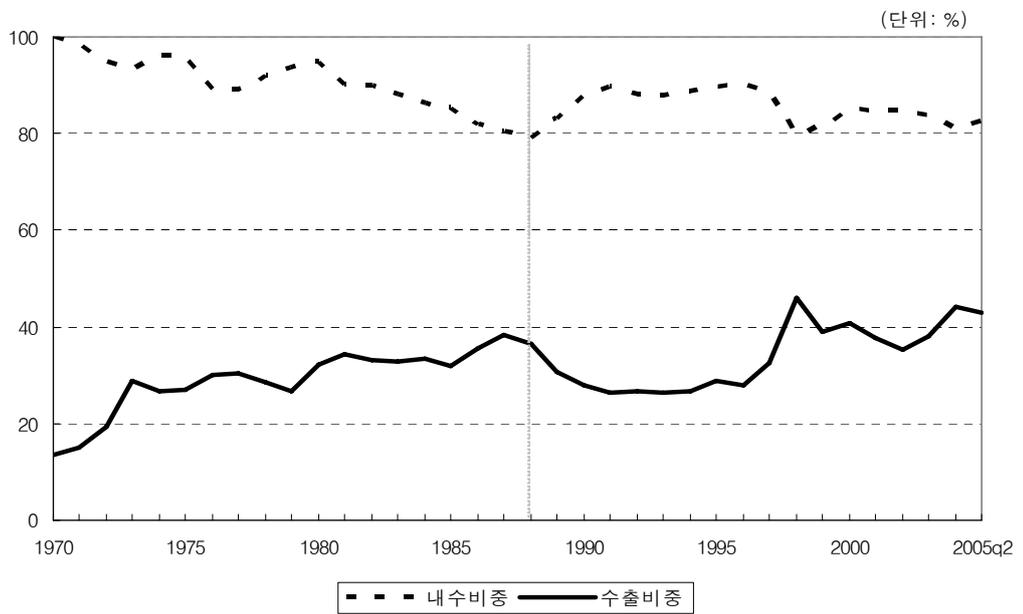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80년대 후반의 경우 내수비중의 확대가 동반되었으며 서비스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아 소득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시작 이후 항상 투자 재원의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투자재원자립도 100%를 넘어 1988년 129.3%로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고도성장 시기와 같이 투자 재원의 마련을 위해 분배 및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임금상승과 소비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내수 비중은 1988년 79%에서 1991년 89.6%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림 6] 투자자원자립도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내수와 수출의 대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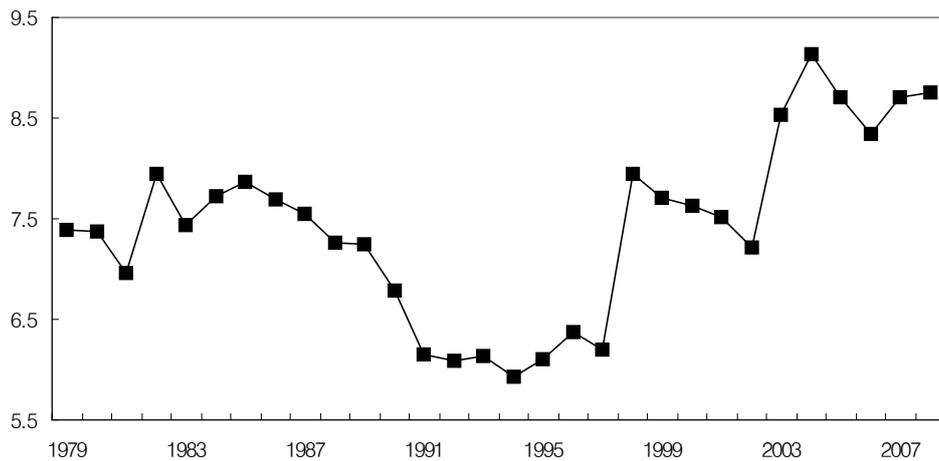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처럼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 및 투자재원자립도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확대 및 내수비중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의 소득분포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성명재(2009)가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의 불균등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1987~1992년 사이 0.281에서 0.238로 낮아졌다. 또한 [그림 8]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의 추이를 보면 1987년 7.55에서 1994년 5.92로 낮아졌다.²⁾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와 같은 분배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수단이 강구되는 등 분배구조개선이 처음으로 경제개발전략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설정되었다.³⁾

[그림 8] 근로 소득 10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

2) 현재 가장 긴 시계열을 가진 통계청 자료는 근로소득 10분위 자료이다. 이 표에서 사용된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가구균등화 처리 등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치이므로 뒤에서 살펴볼 소득분배지수들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한 모습을 띠므로 개략적 소득분배상황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1988)」 참조

그밖에 1990년대 중반에 산업양극화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본격적 전환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박준경(1994)은 제조업 양극화의 원인이 경공업의 지식집약화에 자원이 과소 배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별 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역산업기반의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도훈(1995)은 산업간 경기양극화를 1980년대의 빠른 임금상승과 후발 개도국의 국제시장 참여가 맞물려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 및 사양화가 정상적 산업구조 고도화의 속도를 앞지름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보다 빠른 지식,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온기원·신현수·허광숙(1996)은 산업간 경기양극화를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상적 구조조정 과정으로 파악하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고용보다 설비투자의 비중이 더 큰 중공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배출된 근로자들의 영세 서비스업 진입과 그로 인한 서비스업의 공급과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는 면을 지적했다.

그러나 눈여겨 볼 점은 이 시기의 산업양극화가 경기확장기에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인데, 경기확장이 주로 자본집약적 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에 기인했기 때문에 중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이 시기의 산업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며 양극화에 대한 논의 또한 소득분배의 문제보다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III. 최근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응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추이는 고전적인 쿠즈네츠의 역U자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 개발 초기에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성장이 계속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됨에 따라 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이러한 고전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세적 악화를 겪게 되었다.

1.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와 중산층 감소

가.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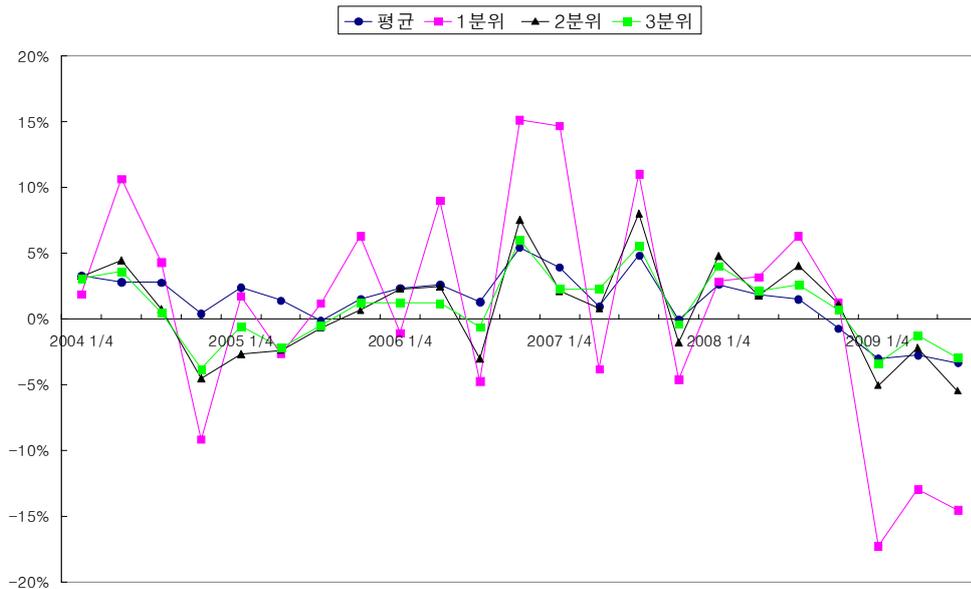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을 위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니계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계산 방법은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누적인구의 백분율을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누적소득의 백분율을 그려 로렌츠곡선을 구한 후, 로렌츠곡선과 소득분배균등선(45° 선) 사이의 면적을 소득분배 균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두 번째는 소득 5분위 배율 혹은 소득 10분위 배율인데 소득 상위 20% 집단 및 10% 집단의 평균소득을 각각 소득 하위 20% 집단 및 1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며 계산의 편리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지수 이외에 널리 쓰이는 소득불평등도 지수로는 상대적 빈곤율을 꼽을 수 있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1990~2008년간의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를 보면 [그림 10]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2008년 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각각 0.268, 4.09배, 9.3%에서 0.325, 6.2배, 15.4% 등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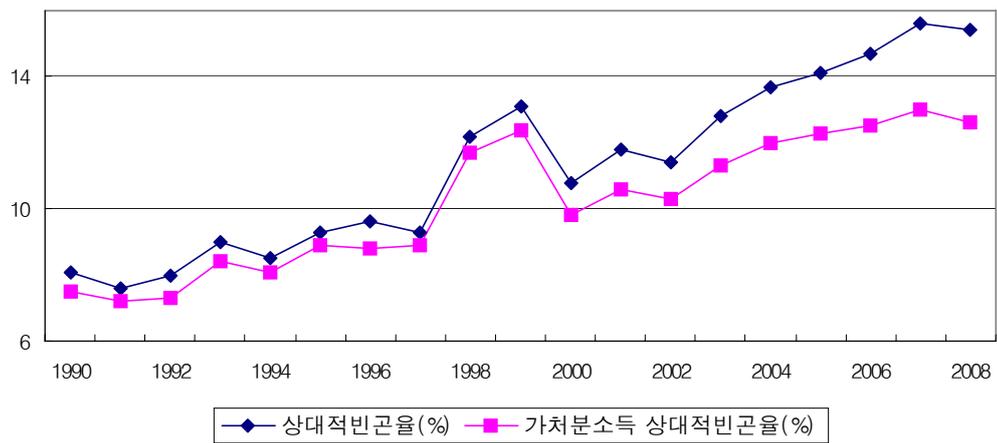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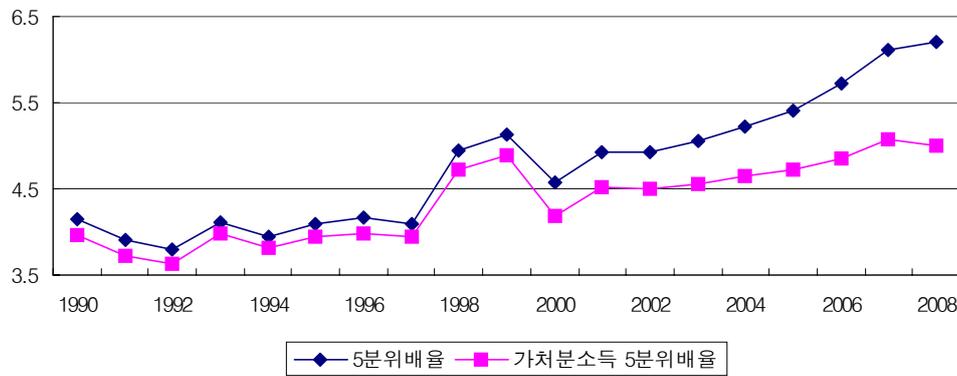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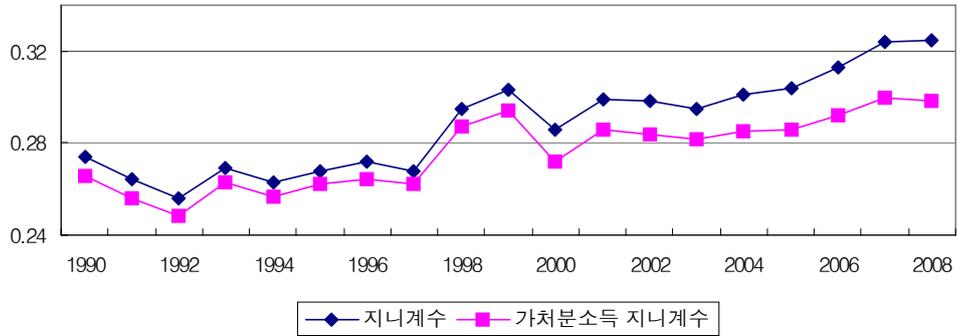
또한 외환위기 당시에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증가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소득 10분위 계층 중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그림 9]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 저소득층 분기별 소득 증가율의 최근 동향(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그림 10] 지수별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자료: 통계청

나. 중산층의 감소

중산층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OECD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OECD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여 중간인 2, 3, 4 등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중산층을 중위소득 부근의 인구계층으로 규정한 후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중산층 몰락 정도를 지수로 측정하는 “Wolfson 지수” 등이 있다. 유경준(2008)은 임금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한 소득분포를 이용하여 중산층 관련 지표를 측정할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산층의 가구비중과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Wolfson 지수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임을 밝혔다.

한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1992년도에 75.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63.3%를 기록하고 있다. 1992~2008년간 빈곤층의 경우 7.7%에서 14.3%로 증가하였으며 상류층의 경우 17.1%에서 22.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 기간의 중산층 비중 감소분인 11.9% 가운데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6.6%이며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5.3%로서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다.

그 밖에 남준우(2007)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150%로 설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1998~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기간 동안 전체 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이 1.6%p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계층 비율(OECD 기준)

(단위: %)

구분	전국가구(1인 및 농가제외)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중위소득 0.5미만	중위소득 0.5~1.5	중위소득 1.5초과	중위소득 0.5미만	중위소득 0.5~1.5	중위소득 1.5초과
1990	-	-	-	7.5	74.6	17.8
1991	-	-	-	7.2	75.0	17.8
1992	-	-	-	7.3	76.5	16.2
1993	-	-	-	8.4	74.3	17.3
1994	-	-	-	8.1	74.8	17.1
1995	-	-	-	8.9	73.8	17.3
1996	-	-	-	8.8	73.5	17.6
1997	-	-	-	8.9	72.7	18.4
1998	-	-	-	11.7	68.5	19.9
1999	-	-	-	12.4	68.0	19.5
2000	-	-	-	9.8	70.7	19.5
2001	-	-	-	10.6	69.5	19.8
2002	-	-	-	10.3	69.1	20.6
2003	12.1	69.0	18.9	11.3	70.1	18.6
2004	12.8	67.8	19.4	12.0	69.0	19.0
2005	13.2	67.1	19.7	12.3	68.4	19.4
2006	13.0	66.6	20.5	12.5	67.0	20.5
2007	13.4	65.9	20.6	13.0	66.3	20.8
2008	13.3	65.5	21.2	12.6	66.1	21.3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임. 도시가구의 경우 근로자외가구도 포함.
자료: 통계청

2. 최근 소득불평등도 심화의 원인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고용유연화로 인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에 따른 수출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및 대기업 고용비중 감소, 내수부진 및 생산성 격차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하락 및 퇴출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2002년 이후 2년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9.6%p 늘어나 2004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37%를 기록하면서 소득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근로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185만 2천원이며 정규직은 220만 1천원, 비정규직은 120만 2천원으로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54.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9년간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의 경우 145만 6천원에서 220만 1천원으로 51.1%p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97만 7천원에서 120만 2천원으로 23%p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2002년 1,019만명에서 2009년 1,072만 5천명으로 5.2%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383만 9천명에서 575만 4천명으로 50%p 증가하여 동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 244만 9천명의 78.2%를 차지하였다.

[표 2]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규모

(단위, 만원, 천명)

		임금 근로자	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정규직	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비정규직	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임 금	02.6~8월 평균	132.5		145.6		97.7	
	03.6~8월 평균	146.6	10.64%	167.8	15.25%	102.8	5.22%
	04.6~8월 평균	154.2	5.18%	177.1	5.54%	115.2	12.06%
	05.6~8월 평균	159.3	3.31%	184.6	4.23%	115.6	0.35%
	06.6~8월 평균	165.6	3.95%	190.8	3.36%	119.8	3.63%
	07.6~8월 평균	174.5	5.37%	200.8	5.24%	127.6	6.51%
	08.6~8월 평균	184.6	5.80%	212.7	5.90%	129.6	1.60%
	09.6~8월 평균	185.2	0.3%	220.1	3.5%	120.2	-7.3%
규 모	2002. 08	14,030	(100.0)	10,190	(72.6)	3,839	(27.4)
	2003. 08	14,149	(100.0)	9,542	(67.4)	4,606	(32.6)
	2004. 08	14,584	(100.0)	9,190	(63.0)	5,394	(37.0)
	2005. 08	14,968	(100.0)	9,486	(63.4)	5,483	(36.6)
	2006. 08	15,351	(100.0)	9,894	(64.5)	5,457	(35.5)
	2007. 08	15,882	(100.0)	10,180	(64.1)	5,703	(35.9)
	2008. 08	16,104	(100.0)	10,658	(66.2)	5,445	(33.8)
	2009. 08	16,479	(100.0)	10,725	(65.1)	5,754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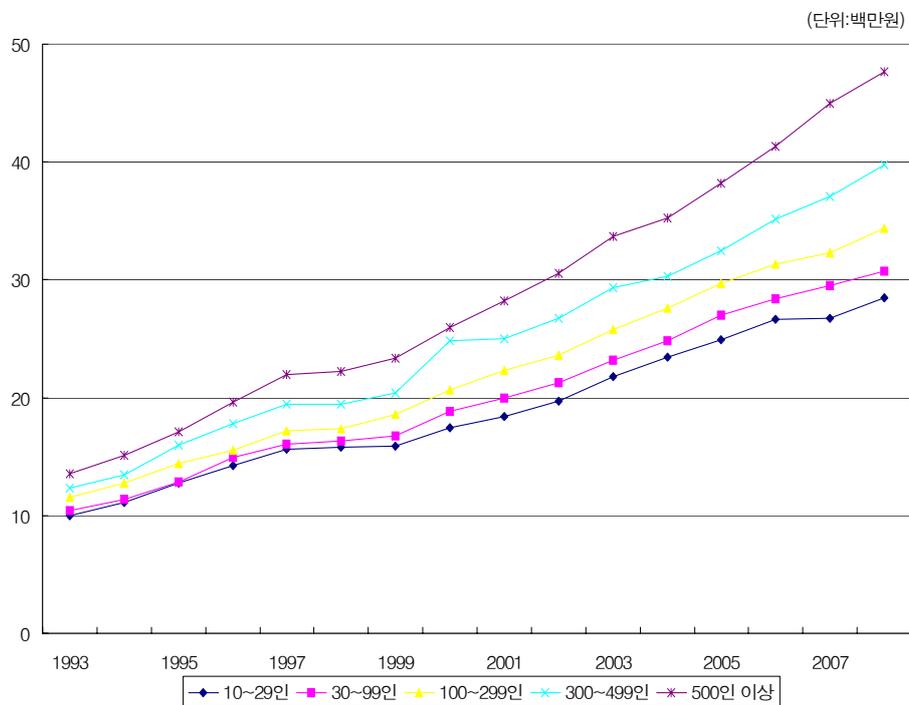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업체와 소규모 자영업체간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종업원 10~29인 규모의 기업체 연봉 총액은 1993년 1,000만원에서 2008년 2,842만원으로 184% 증가에 그친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동 기간 중 1,351만원에서 4,769만원으로 252% 증가하였다. 5인 이상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을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 10~29인 규모의 기업체 연봉 총액은 1993년 87.1에서 2008년 87.0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동 기간 중 117.7에서 146.0으로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졌다.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첨단산업 및 수출의 호조와 내수산업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임금격차는 규모의 격차에서 비롯된 생산성의 차이도 작용하고 있다.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연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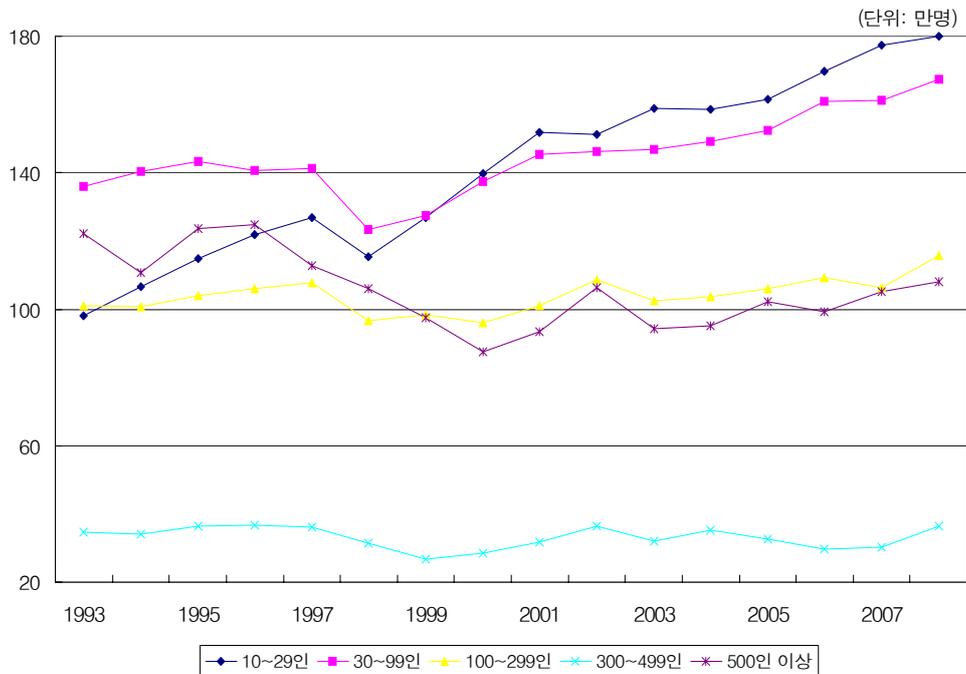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993년 122만명으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근로자의 24.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현재 108만명으로서 그 비중이 14.9%로 줄어들었다.

10~29인 사이 기업의 경우 1993년 98만명으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근로자의 19.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현재 179만명으로 24.8%를 차지하여 유일하게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상대적 고용비중 뿐만 아니라 절대적 고용규모 또한 1993년에 비해 13만 9천명 줄어들었다. 즉,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고용증가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증가가 임금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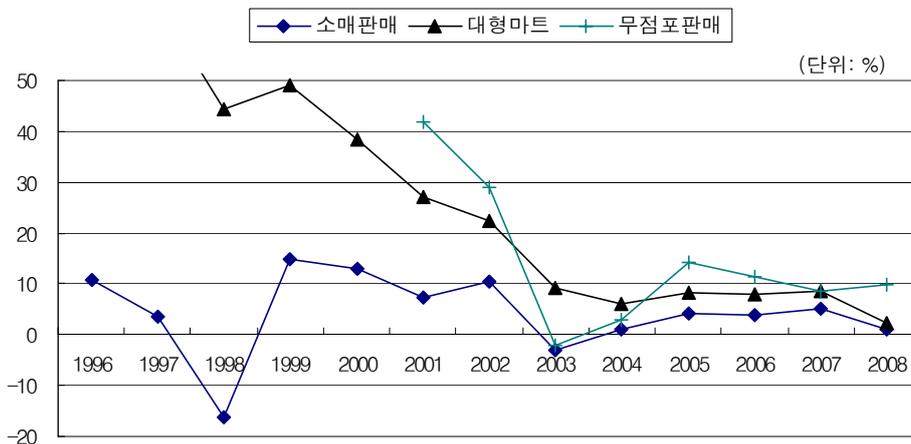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양극화 및 서비스업 부문내의 구조조정 도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요소투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어 감에 따

라 과거 제조업에 종사하던 저숙련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상대적으로 저학력,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이들 저숙련 노동자들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 불완전 고용 혹은 영세자영업 등의 형태로 몰려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의 여파가 겹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양극화 현상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는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 서비스업의 양극화는 규모와 생산성의 차이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으며 [그림 13]에서 나타난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가 시사하듯이 소형업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통업에서 대형할인점의 등장은 교통의 발달과 승용차 보유율의 증가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온라인업체발달은 정보통신산업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 서비스업의 양극화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간 잠재되어 있던 서비스업 내부의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소매업태별 판매액 증가율



자료: 통계청

3. 정책적 대응 방향

소득분배 악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재분배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본 절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간략히 논한다.

먼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등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줄어드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과잉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성장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빨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에서 방출된 저숙련 인력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보육 및 환경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업의 과잉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장에 의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던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 정책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시행되는 각종 고용 지원 사업은 많은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가장 고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별도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낮은

연장근무 등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여유가 없으며 중소기업이 많아 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숙박, 음식점업, 소매업 등 취업자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시간이 가장 길어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소득수준이 낮아 금전적 교육훈련 부담 능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보다 쉽게 직업훈련을 받아 원활한 직업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투자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요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적정수익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술개발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 기술력 담보와 부품소재의 수입으로 귀결되어 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수요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보다 구체적인 유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신생기업들에 대해서 개발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담보 대출방식의 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비정규직 비중확대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 고용불안정성 증가와 임금격차의 확대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분배관련 지표 국제비교

한 사회의 바람직한 소득분배의 수준은 절대적 기준이나 수치에 의해 주어질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선호 및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경제학이 주어진 분배 구조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분배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취합하여 가장 적절한 분배 수준 및 분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고유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를 취합하고 분배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분배 수준 및 재분배에 대한 국민 견해

가. 사회통계조사에 나타난 분배 수준에 대한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국민 견해

2009년 통계청이 전국 약 3만 3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에 대한 최근 견해가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전국 기준으로 70.1%의 응답자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25.7%는 보통, 4.1%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39세 사이의 72.5%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은 63%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령층은 빈곤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연령층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분배 불평등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실제 분배 상황 이외에 분배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짐작

케 한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66.8%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68.2%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기능·노무 종사자는 76.1%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60.0%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100~200만원 사이인 응답자의 73.2%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07년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소득원별로도 분류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주를 차지하는 응답자의 79.5%가 불공평하다고 답한 반면 재산소득이 주를 차지하는 응답자의 64.7%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가 매우 높은 편이며 집단별 견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집단과 월소득 600만원 이상, 재산소득이 소득의 주를 차지하는 집단 등 두 대조적인 집단에서 분배의 불공평에 대한 견해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비해 2009년도 조사에서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견해가 줄어든 데는 꾸준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분배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공			보 통	불		
		평	매 우	약 간		공	약 간	매 우
2007년	100.0	2.3	0.5	1.8	20.8	76.9	42.8	34.1
2009년	100.0	4.1	0.6	3.5	25.7	70.1	43.3	26.8
도 시	100.0	4.3	0.6	3.7	25.8	69.9	42.3	27.6
농어촌	100.0	3.3	0.5	2.8	25.4	71.3	47.7	23.7
남 자	100.0	4.2	0.7	3.6	24.9	70.9	43.1	27.8
여 자	100.0	4.0	0.5	3.5	26.6	69.4	43.5	25.9
15 ~ 19 세	100.0	4.3	0.8	3.5	24.2	71.5	43.0	28.5
20 ~ 29 세	100.0	4.4	0.6	3.9	23.4	72.2	42.6	29.5
30 ~ 39 세	100.0	4.2	0.4	3.7	23.3	72.5	41.6	30.9
40 ~ 49 세	100.0	4.3	0.6	3.7	25.0	70.7	42.8	27.8
50 ~ 59 세	100.0	3.9	0.7	3.2	25.7	70.4	44.9	25.5
60 세 이 상	100.0	3.6	0.5	3.1	32.1	64.3	45.2	19.1
65 세 이 상	100.0	3.5	0.3	3.2	33.5	63.0	45.4	17.6
초 출 이 하	100.0	3.2	0.5	2.7	30.0	66.8	45.8	21.0
중 출	100.0	3.5	0.6	2.9	24.1	72.5	45.5	27.0
고 출	100.0	3.8	0.6	3.2	24.4	71.9	43.0	28.8
대 출 이 상	100.0	5.3	0.6	4.6	26.0	68.7	41.4	27.3
전 문 관 리	100.0	5.0	0.7	4.3	26.7	68.2	41.8	26.4
사 무	100.0	4.3	0.4	3.9	26.0	69.7	40.5	29.2
서 비 스 판 매	100.0	4.2	0.5	3.7	25.1	70.7	43.8	26.9
농 어 업	100.0	3.8	0.2	3.6	26.3	69.9	49.4	20.4
기 능 노 무	100.0	3.1	0.5	2.6	20.9	76.1	45.0	31.0
소득 50만원 미만	100.0	2.2	0.3	2.0	25.2	72.6	46.0	26.6
50 ~ 100만원 미만	100.0	2.8	0.4	2.4	25.8	71.4	46.0	25.5
100 ~ 200만원 미만	100.0	3.4	0.7	2.8	23.3	73.2	43.9	29.3
200 ~ 300만원 미만	100.0	4.0	0.4	3.5	24.3	71.8	43.2	28.6
300 ~ 400만원 미만	100.0	4.5	0.6	3.8	26.2	69.3	43.0	26.4
400 ~ 500만원 미만	100.0	5.3	0.7	4.5	27.7	67.1	42.6	24.5
500 ~ 600만원 미만	100.0	5.9	0.6	5.3	29.1	65.0	39.4	25.6
600만원 이상	100.0	6.8	0.9	5.9	33.2	60.0	39.8	20.1

자료: “2009년 사회 조사 결과”, 통계청, 2009.11.24.

나.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나타난 분배 수준 및 재분배에 관한 국민 견해

앞서 살펴본 “사회통계조사보고서”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자체적 설문 조사이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배에 대한 견해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식을 통일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케 한 것이 “한국종합사회조사”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한국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한 연차적 전국표본조사로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NORC의 GSS를 기본모형으로 설계되었으며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45개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 모듈을 포함한다. KGSS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과 매년 주제를 바꾸어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 모듈로 나뉘는데 표본의 크기는 2000~2500이며 유효표본율은 약 66%이고 표본에 대한 조사는 직접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소득양극화분석과 관련된 주제모듈은 2003년의 “사회불평등”이 있으며 소득에 관한 질문은 반복핵심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KGSS의 소득 및 분배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은 수치적 분석이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분석인데 그 이유는 KGSS에서 세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관련 질문항목들은 수치가 아닌 주관적 견해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핵심질문 분석결과는 양종희·김석호·강지환(2009) 참조)

먼저,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큰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표 4]의 (a)에서 보듯이 54.1%가 매우 찬성, 38.7%가 다소 찬성하여 모두 92.8%가 찬성하였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35.8%가 매우 찬성, 43.9%가 다소 찬성하여 모두 79.8%가 찬성하였다. 한편 13%가량의 응답자는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데 동의하였으나 차이를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2005년과 2006년에 실시된 유사한 질문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⁴⁾ 즉, KGSS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의

4) 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화 및 복지지출 비중의 변화에 따른 향후의 견해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불평등도가 크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한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6.6%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54.6%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여 모두 81.2%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반면 17%만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4.9%가 너무 적게 쓴다고 답한 반면 1.9%만이 너무 많이 쓴다고 응답하였다. 21.2%는 적당하게 쓴다고 답하였다.

[표 4] 분배 및 사회복지 관련 견해

a. “한국에서는 소득차이가 너무 크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 (2003년)

(단위: 명,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선택 불능	합계
합계	712 (54.14)	509 (38.71)	65 (4.94)	13 (0.99)	11 (0.84)	5 (0.38)	1315 (100.0)

b.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 (2003년)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선택 불능	합계
합계	472 (35.89)	578 (43.95)	168 (12.78)	69 (5.25)	21 (1.60)	7 (0.53)	1315 (100.0)

c.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 (2003년)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약간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선택 불능	합계
합계	20 (1.5)	204 (15.5)	718 (54.6)	350 (26.6)	23 (1.7)	1315 (100.0)

d. “ 사회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 (2003년)

구분	너무 많이	적당하게	너무 적게	모름/ 무응답	합계
합계	25 (1.9)	279 (21.2)	985 (74.9)	26 (2.0)	1315 (100.0)

e. “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평등 혹은 불평등한가 ” (2005년)

구분	매우 평등	약간 평등	그저 그렇다	약간 불평등	매우 불평등	모름/ 무응답	합계
합계	19 (1.2)	190 (11.8)	369 (22.9)	569 (35.3)	406 (25.2)	60 (3.7)	1613 (100.0)

f. “ 빈부간 소득격차 완화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책임이 있나 ” (2006년)

구분	당연히 정부책임	아마도 정부책임	아마도 정부책임아 니다	당연히 정부책임 아니다	모름/ 무응답	합계
합계	632 (39.4)	627 (39.1)	252 (15.7)	51 (3.2)	43 (2.7)	1605 (100.0)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각년도

다. 분배 수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의 국제 비교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주요 설문들은 45개 회원국간에 표준화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장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를 회원국의 수치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의 비율은 라트비아 96%, 러시아 93.9%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역시

92.8%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포르투갈 95%, 스페인 88.3%, 프랑스 85.9% 등이 회원국 평균 80.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61.7%가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일본 역시 63.8%로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필리핀의 경우도 64.9%로서 낮은 수치를 보여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객관적인 소득분배 상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포르투갈이 89.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러시아 82.1%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도 77.84%로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은 32.6%만이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 두드러지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캐나다 44%, 서독 47.2%, 일본 47.4% 등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나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62.1%가 동의하여 회원국 평균 65.6%보다 낮았다.

한편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 비율에서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을 뺀 후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 비율로 나눠준 수치가 [그림 14]의 C에 나와 있는데 이는 소득격차가 크다고 느끼면서도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으로서 각국의 개인주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수치라 할 것이다. 미국은 이 수치가 47.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독 34.7%, 프랑스 27.7%, 일본 25.7%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은 16.2%로서 회원국 평균 18.7%보다 다소 낮았다.

소득격차 및 재분배에 대한 견해의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각국의 현재의 소득격차 및 사회복지지출의 수준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국민 인식 및 견해가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분배 수준과 사회적 지출 국제비교

가. 소득불평등도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상대적 빈곤률⁵⁾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해 보면, [그림 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빈곤률은 14.5%로서 OECD국가 중 멕시코 18%, 미국 17%, 일본 15% 보다는 낮았으나 OECD 평균인 12% 보다는 높았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6%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빈곤률을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은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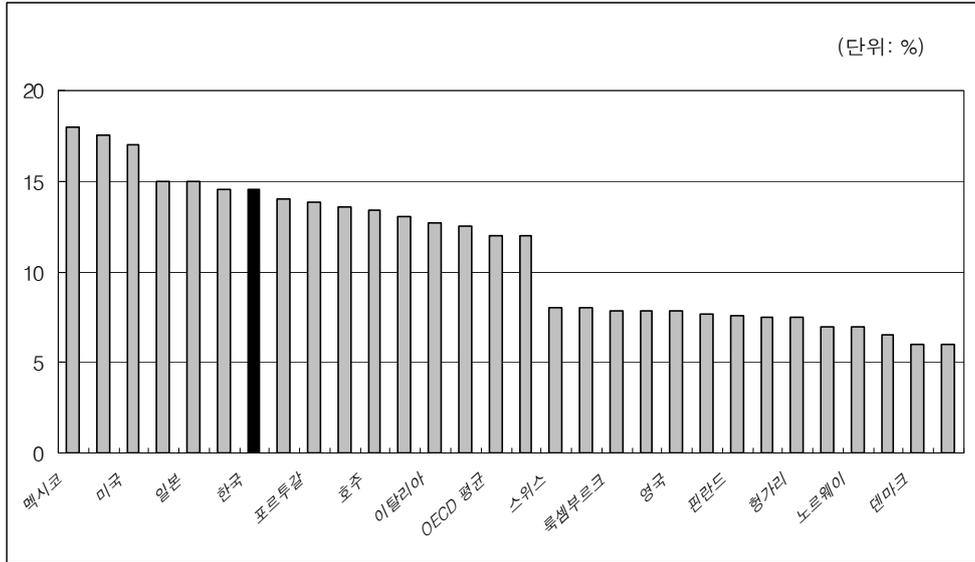
한편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의 고령가구만을 상대로 빈곤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45%로 OECD 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24%, 일본은 21%의 고령가구가 빈곤선 이하였으며 뉴질랜드는 1%, 네덜란드는 2%로 나타나 고령빈곤률이 가장 낮았다.

지니계수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실제 소비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31로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며 미국과 포르투갈이 0.38로서 가장 높았고 일본은 0.32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았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이 0.23으로 가장 낮았다. 조세와 이전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의 경우 폴란드와 이탈리아가 각각 0.57, 0.5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스위스와 우리나라가 0.35와 0.3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특히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측정되었을 때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게 파악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액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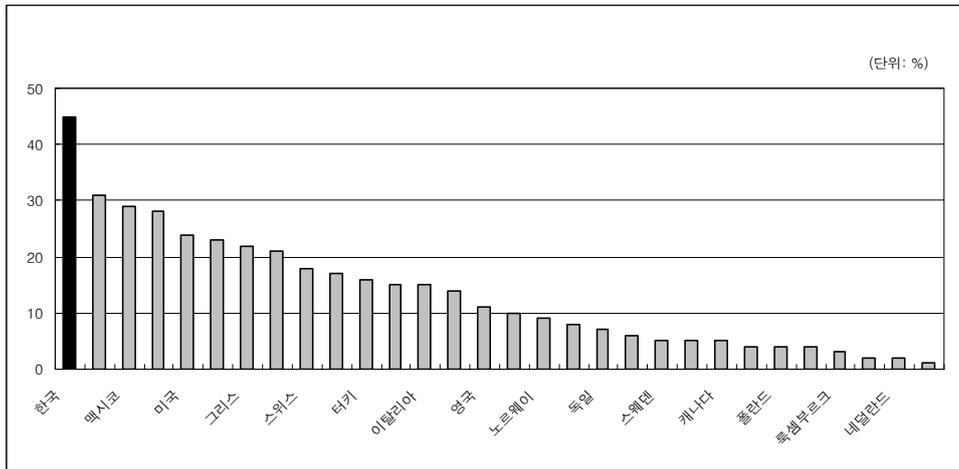
5)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15] 상대적 빈곤률 국제비교

a. 전체 가구



b. 고령가구



주: OECD가 집계한 각국의 2000년대 중반 통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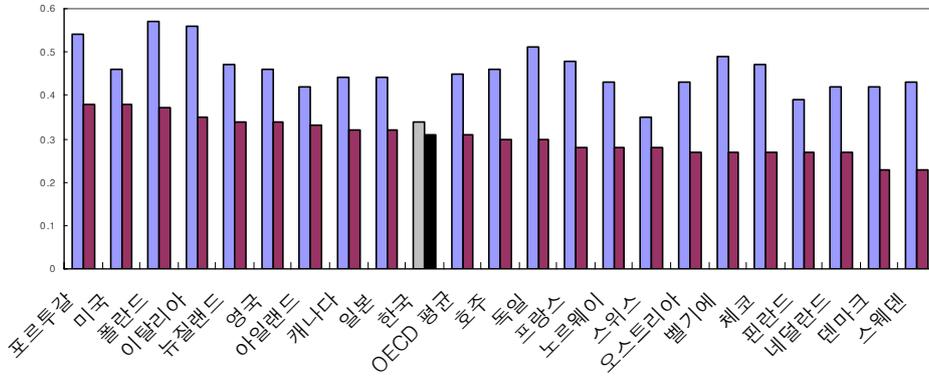
자료: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10.21.

무관하게 측정되는 상대적 빈곤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근로소득 10분위배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자영업 소득과 악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인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선진국에 비해 특히 낮다. [그림 16]의 C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경우 고령인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높은 것이 전체인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연령인 18-65세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반면 66세 이상 고령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령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특별히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통계청의 시장소득 개념이 우리나라 빈곤층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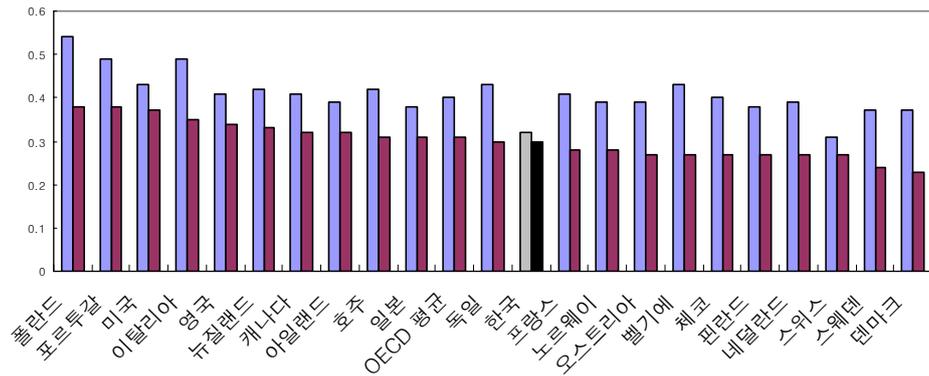
한편 OECD에서는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비교를 위한 지수로서 소득10분위 배율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사용하는데 소득10분위 배율은 근로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최상위 10%의 근로소득을 최하위 10%의 근로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다. [그림 17]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불평등도는 미국과 더불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아 최상위 10%의 임금이 최하위 10%의 임금보다 평균 4.86배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그 다음으로 4.48배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3.12배로 평균 수준이었으며 핀란드 2.49%, 스웨덴 2.31%, 노르웨이 2.11% 등 북유럽 국가들의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경우 한국이 25.6%로서 OECD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그 다음으로 24.5%였다. 일본의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15.4%였으며 스웨덴과 벨기에는 각각 6.4%, 6.3%로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림 16] 지니계수 국제비교(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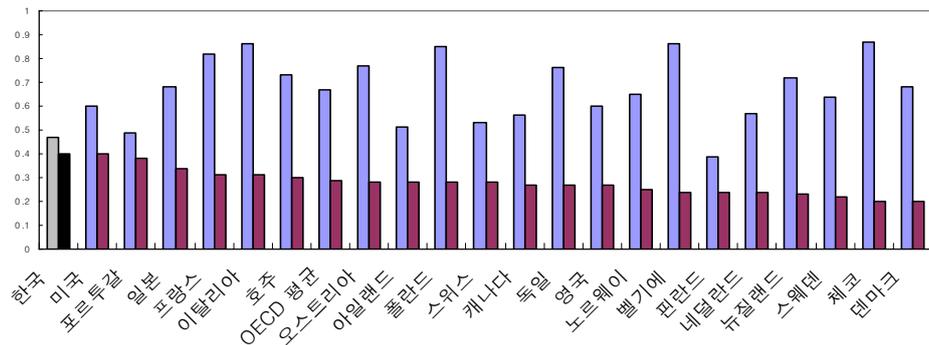
a. 전체 가구



b. 18-65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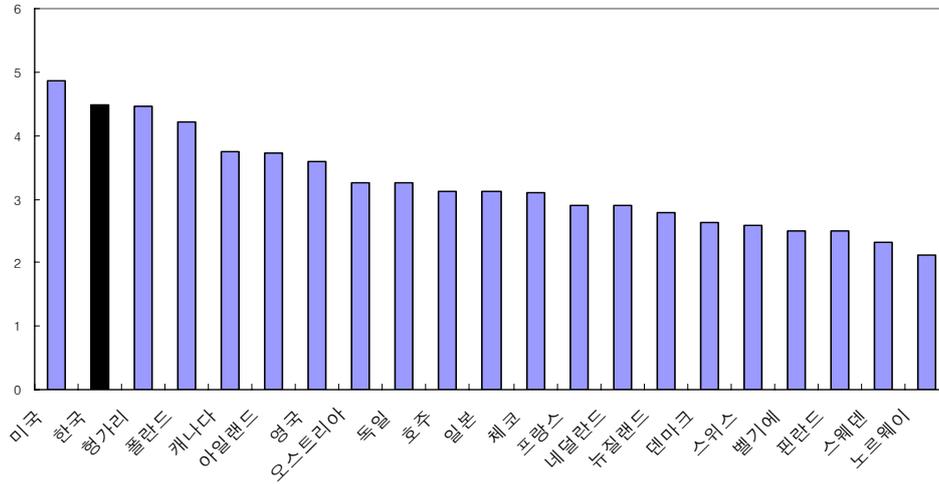
c. 66세 이상 가구



자료: OECD database
 주: 한국은 2006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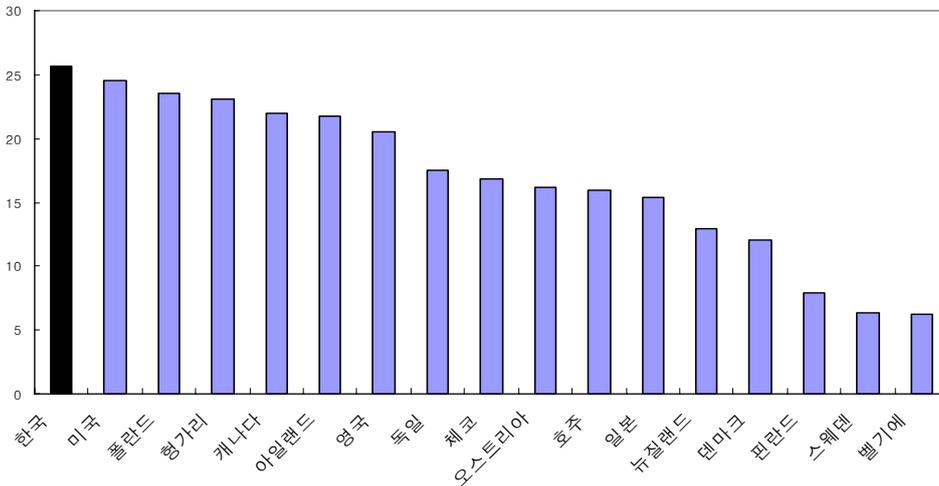
[그림 17] 근로소득 불평등도(2007년)

A. 소득10분위 배율



B.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OECD database

나. 사회보호지출⁶⁾(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수준 국제비교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총지출 혹은 국내총생산 가운데 사회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재정부담의 크기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는 [표 5]와 같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에서 2007년 22.2%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21.6%로 감소하였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1995년 19.4%에서 2007년 28%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27.4%로 감소하였다.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과 사회보험수입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덴마크와 벨기에가 각각 48.9%와 48.1%로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은 36%,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낮은 28%로서 일본 28.3%, 미국 27.9%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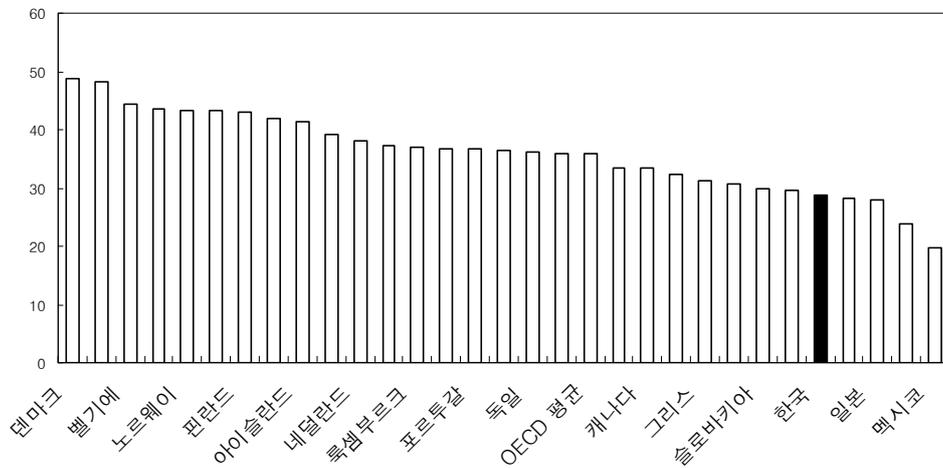
한편 일반정부의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19]의 A와 같이 우리나라가 28.6%로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으며 미국, 일본이 각각 36.6%, 36.3%를 지출하였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5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총지출에서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의 비중은 [그림 19]의 B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GDP 대비 총지출 비중과 총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중의 결과 GDP에서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가 3.5%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지출에서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의 분야별 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사회보호와 같은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22% 낮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의 지출 비중은 OECD 평

6) 재정지출의 분야별 분류를 위한 국제기준은 UN에서 작성한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가 사용되는 데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군보다 각각 5.5% 및 11.5% 높았다. 물론 각 분야의 국가별 지출 비중은 고령화 수준, 실업률 등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단순 비교만으로 그 크기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박승준(2008)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도 단순 비교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분야별 지출의 상대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18]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07년)



자료: OECD

[표 5]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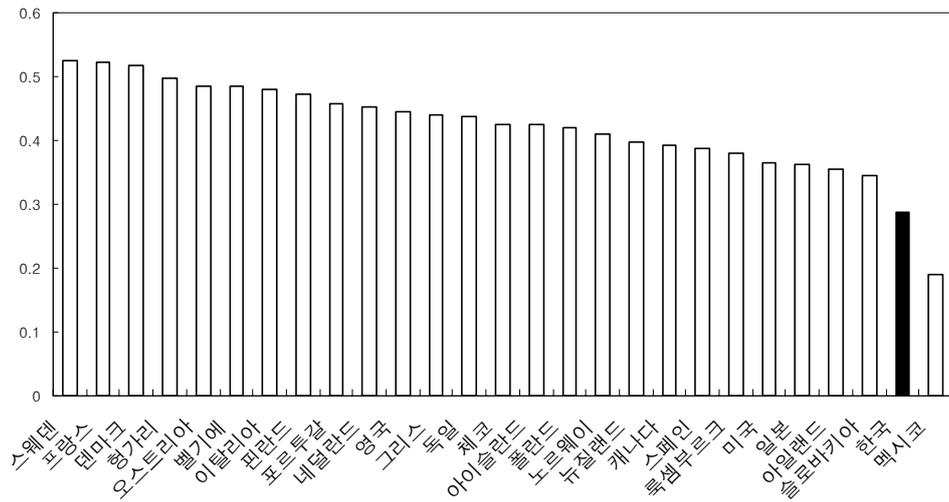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조세 부담률	18.1	18.4	18.0	17.5	17.8	19.6	19.7	19.8	20.4	19.5	20.2	21.2	22.2	21.6
국민 부담률	19.4	20.0	21.0	21.1	21.5	23.6	24.1	24.4	25.3	24.6	25.5	26.8	28.0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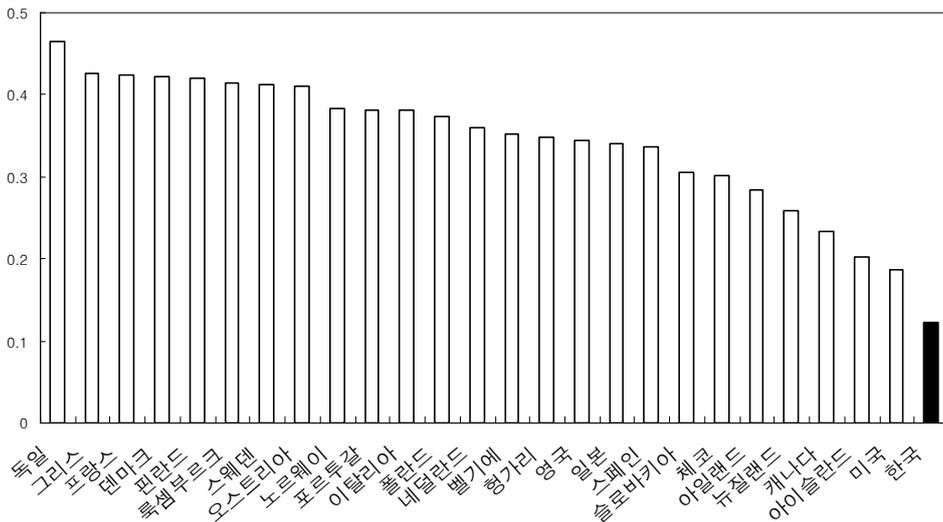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19] 지출 비중 국제비교(2000년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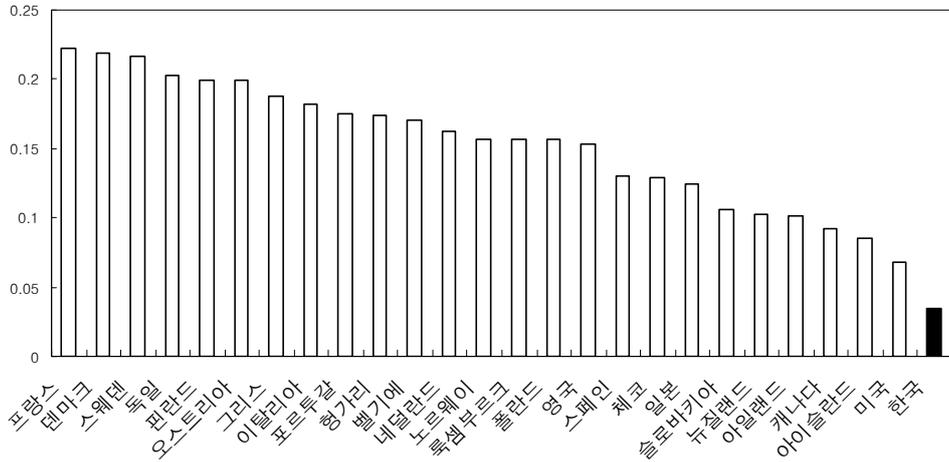
A. GDP 대비 총지출



B. 총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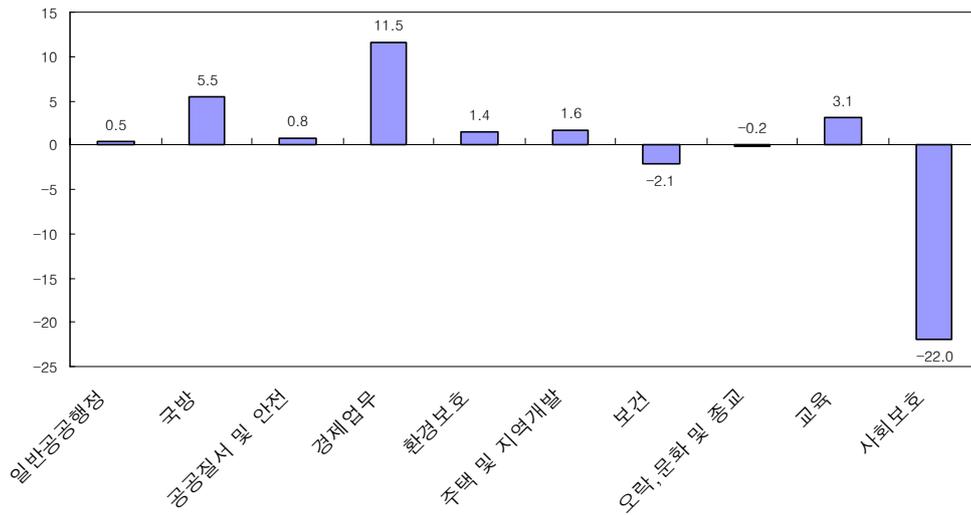
C. GDP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중



자료: OECD database

[그림 20] 한국의 분야별 지출 비중 - OECD 평균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OECD

3. 사회적 지출⁷⁾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복지 지출의 증가와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복지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복지 지출의 효과 부족 때문으로 단정하는 것은 인과관계 적용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양극화는 구조적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장기적인 현상이다. 반면 복지 지출은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복지 지출의 유효성은 소득재분배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소득은 공적 이전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이전의 총소득으로서 가처분소득⁸⁾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두 소득 개념간의 차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정책의 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복지 지출이 증가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즉,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세 및 이전지출(tax and transfer)이 빈곤률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비교한 [그림 22]를 보면 우리나라가 5.1%에 그쳐 OECD 국가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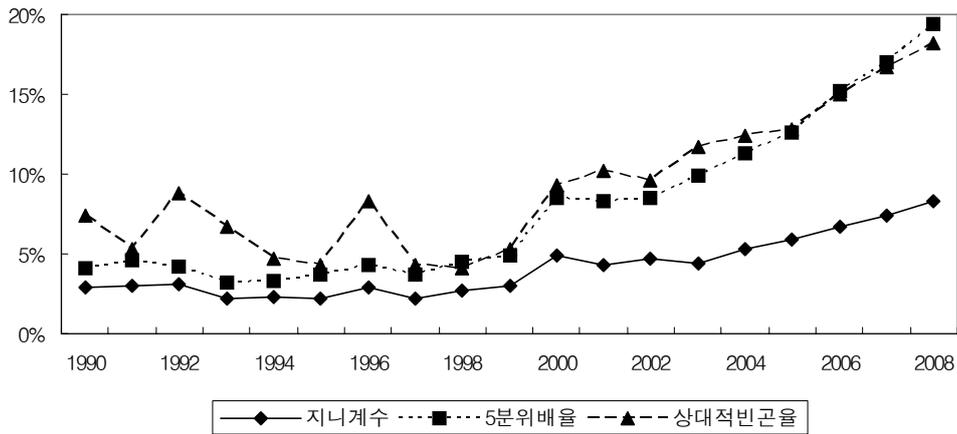
7)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지출을 측정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보호지출(Social Protection Expenditure)보다 더 포괄적이며,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일반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과 사회보험급여,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관련 법정급여를 포함한다.

8) 가계의 시장소득에서 이전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남은 부분이 가처분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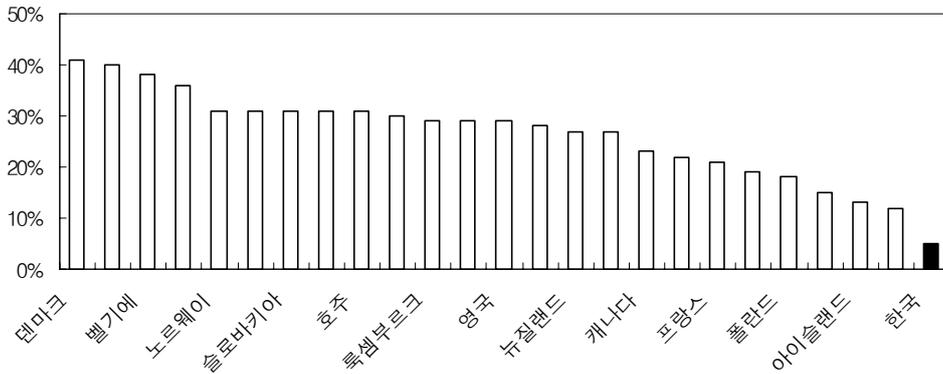
9) 1990년 이전의 경우 복지 지출이 더 작았으므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효과 또한 더 작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데 비해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각각 41.3%와 4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은 26.6%로 나타나 그동안의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소득불평등 지수별 소득분배 개선율¹⁰⁾ 추이



[그림 22]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을 감소 효과



주: OECD가 집계한 각국의 2000년대 중반 통계 수치임.

자료: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10.21.

10) 소득분배 개선율 = (시장소득 불평등 지수 - 가치분소득 불평등 지수)/시장소득 불평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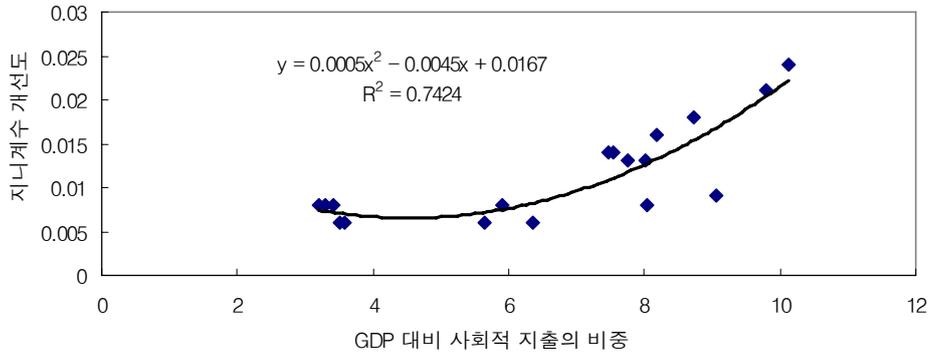
한편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개선, 즉 시장소득 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 불평등도간의 격차 감소분이 사회적 지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짐작키 어렵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도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출 수준이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23]에서 나타나듯이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유사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지수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나 GDP의 6% 수준을 넘어선 이후부터 뚜렷한 소득불평등 지수의 개선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6% 수준에 근접한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의 평균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계산해 보면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0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¹¹⁾ 1995년~2007년 사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증가분이 0.056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추가적 사회적 지출이 필요하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은 5.65%에서 10.12%로 4.47%p 증가하는 데 그쳤으므로 2007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으로서 1995년도의 시장소득 지니계수 0.268에 비해 여전히 더 높다.

한편 2000년 중반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출 수준과 지니계수의 개선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선형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이 1% 더 큰 나라는 평균적으로 지니계수 개선도가 0.007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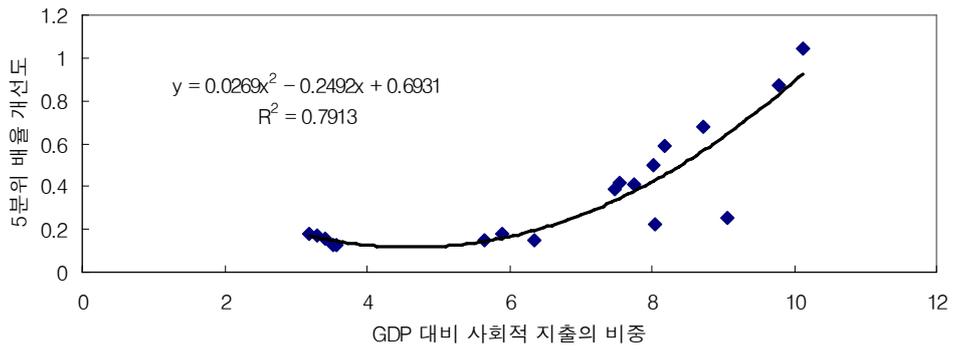
11) 성명재(2009)가 독자적으로 측정한 도시가구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 기간의 지니계수 개선도를 측정해본 결과 GDP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개선도는 0.0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효과가 좀 더 컸다.

[그림 23]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 수준이 소득불평등지수의 개선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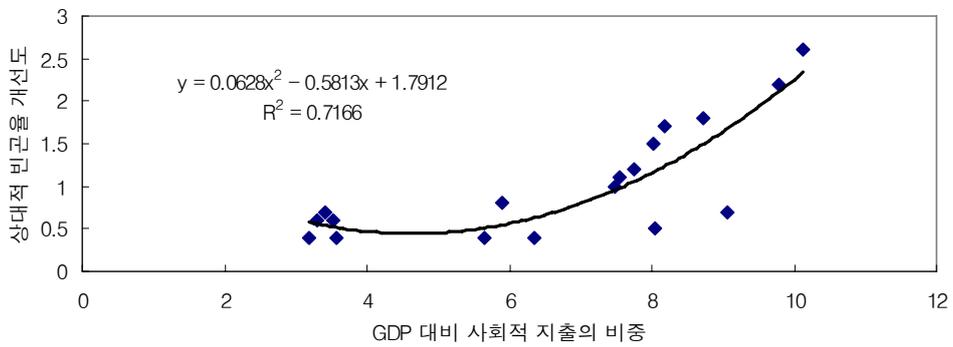
A.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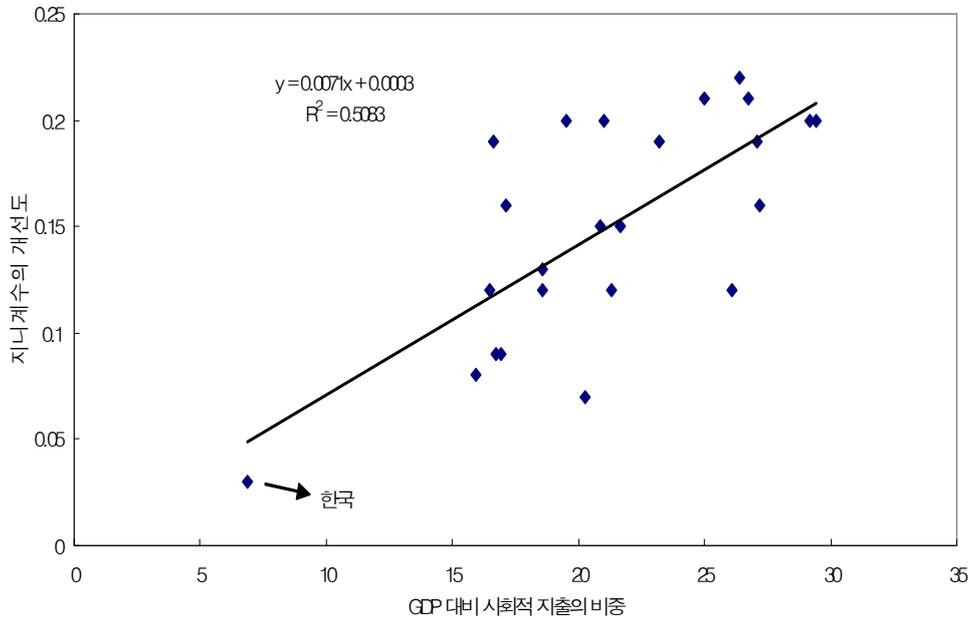
B. 5분위 배율



C. 상대적 빈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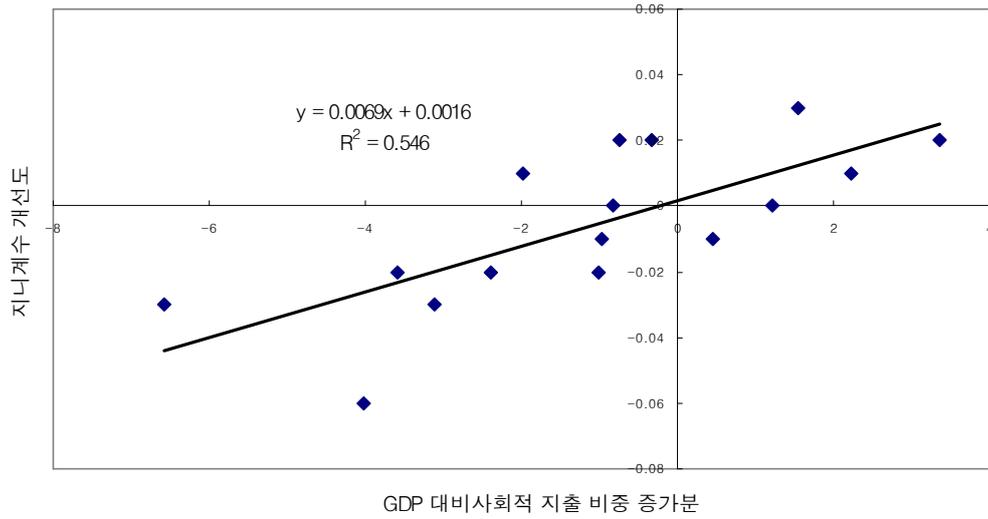
[그림 24]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출 수준과 지니계수 개선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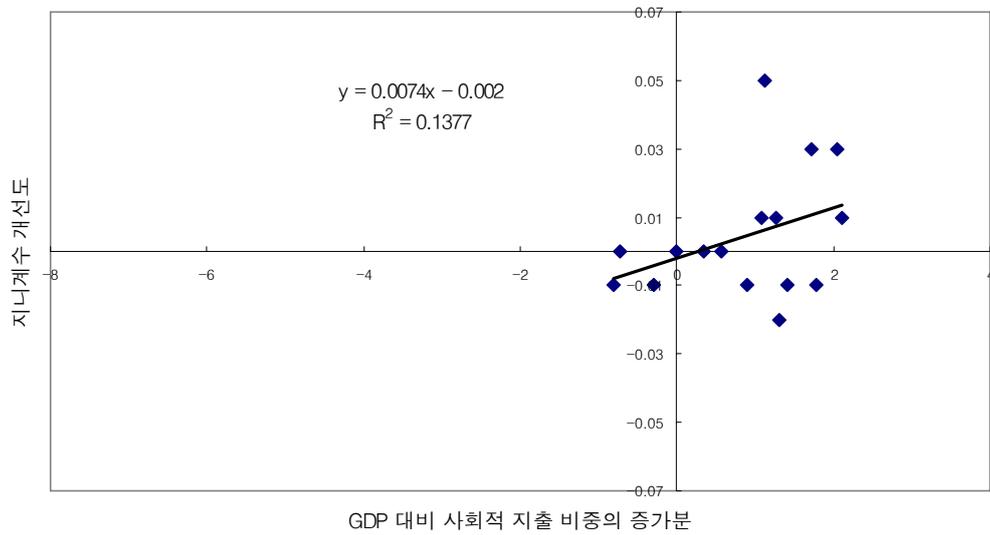
[그림 24]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OECD 각 국가들의 사회적 지출 수준과 지니계수 개선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으나 사회적 지출 수준의 증가가 지니계수의 개선도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사회적 지출 수준의 변화와 지니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5]는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00년과 2005년 사이 OECD 16개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의 변화분을 독립변수로, 지니계수의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의 경우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출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개선도는 0.0069씩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전반의 경우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7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국가간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난 계수 0.007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적 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지니계수의 개선도도 감소한 나라들이 많았던 반면 2000년대 전반에는 사회적 지출의 비중이 증가한 나라가 많았으나 지니계수의 개선도는 나라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의 증가가 지니계수 개선에 미친 영향

A. 1995-2000



B. 2000-2005



V. 맺음말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분배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전적인 쿠즈네츠의 역 U자 이론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분배보다는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소득의 증가 등을 통해 소득 분배의 개선을 이룩하는 방식이다. 1970년대의 소득분배 악화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소득분배 개선 현상은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재분배정책이나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성장을 통한 분배의 해결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이상 70년대의 경우와 같이 높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정책이 곧 복지정책이었던 시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의 증가가 곧바로 복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던 시대가 끝나고 현재의 성장속도에 맞는 현실적인 산업, 고용 및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격차의 개선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활동 단계에서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서는 첫째,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연관효과의 제고 및 수주대기업과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투자사업 강화, 둘째,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떨어지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및 환경 분야 등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업 과잉 인력의 흡수, 셋째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해결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및 고용의 양극화를 완화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추진에는 많은 노력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욕구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시장소득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지출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2008년간의 사회적 지출 증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증가분의 약 47.3%만을 줄이는 데 그쳤다.

물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고려할 때 전체 재정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지출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지출 분야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분야별 자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원·고일동·김관영·김선웅,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 김대모, “고용 및 임금구조의 변화와 소득분배”,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 김도훈, “경기양극화, 그 실태”, KIET 실물경제, 1995.5.24
- 김인철·민성환,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 7권 제 4호, 2007.
- 박승준, “분야별 자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2008.12
- 박준경, “제조업의 양극화”, 「KDI 정책포럼」 제43호, 1994.4.26.
- 성명재,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포럼」 제 148호, 2008.10
- 양종회·김석호·강지환, “한국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의 변화 :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자료 분석(2003-2008)”, mimeo,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2009.
- 온기원, 신현수, 허광숙, “경기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KIET 실물경제, 1996.4.10
- 유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이슈분석, 2008.6
-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 방향”,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임종철,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그 극복”, 크리스천아카데미 총서, 1976
- 장원중,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71
- 전승철·김영준·하준경,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1.24
-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 March, 1-28., 1995

[경제현안분석 목록]

	제목	집필	발간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종	2005. 6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7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종	2006. 6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 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종	2007. 6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2007. 7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연	2008. 8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 이성규	2008. 9
31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2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3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4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41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 신영임	2009. 8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 신영임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
46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심혜정	2009. 12
47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황종률	2009. 12